

‘香粧반세기’

태평양화학은 장업계를 이끌어온 축적된 기술과
첨단화학기술로 화장품의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1945

한국 고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키고 우리 피부에 잘 맞는 국산
화장품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로 출범한 태평양화학—
이는 곧 한국의 화장품 역사의 시작
이었으며 고유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아름다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화학은 ‘품질제일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라는
창업이래 변함없는 기업정신으로
오늘날 국내 최대의 화장품
메이커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1

태평양화학은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 국산화장품 시대의
창을 열었습니다.
창업제 1위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화학분야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을 사들여 국산
화장품을 국제 수준으로까지 향상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장업계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태평양화학은 자부심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그들로서
성장한 태평양화학— 아시아, 유럽,
미주 등지에 해외지사망을 설립하기
시작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써온 결과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환원 실천과 함께 스포츠
및 문화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971



첨단기술의 산실인 태평양 기술연구소
설립 이곳에서 유전공학분야에
장동한 장에 연구진들이 모여 기술
개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언급술이라 불리는
생명공학을 응용 화장품·식품·
의약품·가정용품·효소 분야에까지
많은 성과를 가져온 태평양
기술연구소— 세계 유수의 기업과
학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미래의
첨단기술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8

1988

세계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눈물리기
시작 아오레화장품은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화장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평양화학은 '86아사안제인
'88서울올림픽 공식업체로 선정받아
화장품을 비롯

가정용품, 식품분야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노력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태평양화학은 세계속의
기업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월간여성 8월호(통권 266호) / 1989년 8월 10일
(매월 10일)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과소비 실태와 문제점



1989.8

“본격 피부미용,
살구 크린싱 비누로
시작하세요.”



피부미용의 시작은 비누.
 이제 크림타입의
 살구 크린싱 비누로 새로운
 맛사지 효과를 느껴보세요.
 모공 속의 때까지 말끔이 빼내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주는 것은 물론,
 살구씨오일과 스크럽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해줍니다.

**살구씨오일과 스크럽의
풍부한 미용효과!**

살구씨오일과 스크럽은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E 유도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탄력과 젊음을 되살려 줍니다.

럭키 살구 크린싱 비누

월간 여성

1989년 8월호

통권 266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여성 / 변도윤**
 남성위주사회가 갖는 한계성을
 여성의 잠재력으로 극복하자

특집 / 과소비 실태와 문제점

6 **특집 / 김봉익**
 과소비의 문제점 및 대책

9 **특집 / 배성심**
 과소비 그 문제점은?

12 **특집 / 기자간담회**
 과소비, 이대로 좋은가



18 **사진으로 보는** 용공통일 절대배격 전국
 여성경기대회

22 **근로여성고발장구 / 근로여성상상담부**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1989. 4. 1~7. 31)

26 **소비자 리포트 / 안기희**
 농산물의 발암물질 파동

29 **해외여성소식 / 출판공보부**
 일본사회당 대총리의 주인공
 도이 다카코 위원장

30 **해외여성 ①**
 시애틀리온 여성의 지위

32 **논단 / 전병재**
 협력적 사회현상과 윤리의 위기

36 **여성문화 / 박금옥**
 혁명기 와중에 변화하는 중국여인상

38 **수필 / 최진숙**
 각자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운동

39 **이달의 여성계 동향 / 김경자**



42 **우리들의 공장**

46 **협의회 소식**

47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관

51 **지방여성단체소식 /**
 부산지역

53 **주소록**

①
②
③

표지사진설명 :

- ① ② 용공통일 절대배격 전국
 여성경기대회 전경
 ③ 용공통일 절대배격 전국여성
 경기대회 시가행진 장면

남성위주 사회가 갖는 한계성을 여성의 잠재력으로 극복하자



변도운

(서울YWCA청소년회관 관장·사회기획연구위원)

요즘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보며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스럽게 변화될까하고 걱정하지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민학생의 성폭행, 인신매매사건, 청소년의 범죄, 마약, 잘못되어가는 입시제도와 과외수업, 노사문제, 정치 혼란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속에서 가후마저도 우리 본래의 것이 아닌 열대성 기후현상을 보이는 등 후덥지근한 더위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측면으로는 이 사회의 기득권 내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 사회를 이끌어가는 남성위주문화의 한계성을 다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하는 망연한 생각을 해본다.

이는 남성위주의 사회가 가진 한계성에 비해 많은 잠재력을 가진 여성능력의 개발을 통해 미래사회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남성의 칼, 도끼 등을 사용하여 나누고 부수는 문화와 함께 여성의 바늘 등을 사용하여 깎고 꼬매고 합하는 문화를 이룩하는 속성이 더욱 요구되는 현대사회가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지구의 반이 여성이지만 늘 소수집단인 노인, 어린이 등과 더불어 여성은 특별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이는 집단으로 분류되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진출의 경우도 수적인 증가를 보이고는 있

으나 질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노동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지니는 계층이기도 하다. 여성근로자들은 저임금, 단순기능이거나 무기능, 저학력, 단기간 근로로 인한 가장 어려운 근로조건 속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도시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극히 저조하며 이는 또한 안정된 수입원을 가진 남편을 둔 가정주부의 취업은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계산할 때 취업률이 낮은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 계층의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산업화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부류이기도 하다.

이렇듯 계층화된 다양한 여성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여러방향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 7.23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1947년 초대 참의원 선거 이래 기록적인 22명의 여성의원들이 참의원에 진출했으며 이로써 전체 252석의 참의원중 여성 의원은 기존의 11명을 포함, 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총 3백49석 중 1백32석을 여성이 차지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백99석 중 불과 6명 뿐이며 그나마 지역구 출신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다른나라의 사정과 우리의 실정이 같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사정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는 사회의식 수준의 성숙과 여성 스스로의 정치 참여의식의 향상, 능력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다.

민주화와 함께 급명간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여성개발원이 여성정치 지도자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각여성단체가 조급책이나마 여성과 정치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각 정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시각의 변화이다. 선거철의 선거공약용이 아닌 실제적인 여성정책수립과 실천의지와 함께 여성정치 지도력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당은 과감한 여성전문인력의 기용을 통하여 나누고 분리되고 쪼개는 폭력적 풍토에서 깎고 꼬매어 합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는 시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지럽게 변화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다소라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화합하고 온화한 품성과 속성을 지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만이 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



특집/과소비 실태와 문제점

과소비 현상이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이나 농촌까지 확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특집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과소비 실태를 점검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과소비의 문제점 및 대책

김봉익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물가정책국 유통소비과)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5.7%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출은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2.1%의 증가에 그친 반면, 민간소비는 10.3%나 증가하여 민간소비지출에 의해 성장이 지탱되는 매우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과소비 풍조의 원인

가. 구조적 요인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 수준을 이룩한 단계에서 과거에는 자제되었던 질적 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주식투자 등으로 손쉽게 부를 축적한 일부계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지출이 최근 2년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년 고율로 조정된 임금인상, 정부수매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전

반적인 소득증대로 소비금융, 할부구매,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소비촉진이 가속되었으며 특히 최근 무기만연, 노사분규 확산, 정국불안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에 따라 근검·절약기풍이 상대적으로 퇴조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다.

나. 현상적 요인

구조적 환경속에서 과소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수입개방, 상품의 고급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

업의 고가전략, 향락업소증대, 과대광고 등이 일반국민의 과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일부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와 경쟁적 소비풍조의 만연으로 전시효과에 의한 분수에 넘치는 소비성향이 높아만 가고 있다.

2. 과소비의 유형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5.7%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출은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2.1%의 증가에 그친 반면, 민간소비는 10.3%나 증가하여

민간소비지출에 의해 성장이 지탱되는 매우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9년 1~4월중 사치성 품목의 수요급증실태를 작년같은 기간과 비교한 출고 증가율을 통해 살펴보면, 승용차 40.4%, 전자렌지 61.1%, VTR 115.7%에 이르고 있고, 업체별로는 백화점의 매출이 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85~'89년 5년간 평균매출증가율을 보면 백화점 130.3%, 슈퍼마켓 19.9%, 일반소매업 61.0%이다.

또한 지난 1/4분기중 월평균 가계지출은 25.6%나 늘어 소득증가율 21.5%를 앞질렀고 가계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16% 증가했으며 식료품비 가운데 외식비가 61.5%나 급격히 늘어나 먹고 마시는데 지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가사용품비는 38.7%나 늘어 소비지출비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형냉장고, 진공청소기 등 내구소비재의 구입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통신비 29.2% 중 개인 교통비가 117.6% 늘어 자가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시판담배 가운데 양담배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1월중 3.5%에서 2월에 5.6%로 그 이후 계속하여 5%선을 유지하고 있고, A백화점의 경우 구두, 저갑, 넥타이 등 수입잡화류 매출실적도 지난 1월 1억 6천만원에서 4월중엔 2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3. 문제점

가. 과소비풍조는 우리경제 기조를

파괴.

원래 우리 국민은 과소비보다는 근검·절약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근검·절약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다만 6.25 동안 이후 사회적 신분구조가 무너짐에 따라 대우받기 위한 '겉치레 과소비' 분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과소비 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저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커가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다가올 노후생활을 위한 사전준비 등 장래에 대한 대비가 어렵게 되고 나라경제로 보아도 투자에 필요한 저축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외자로 매꾸게 되면 외채누적이 불가피하게 되며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거의 모든 국내생산재품에도 수입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가 느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 외국을 잘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과소비계층과 건전한 일반소비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건전한 소비계층의 일하고 싶은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민정신의 함양이 곤란하게 되어 사회적 위기감내지 불안조성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과소비현상은 호경기에 편승

과소비현상은 특히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기 쉽다. 지난 70년대 후반 경기 호황시에 우리 모두가 과소비에 잘 대응하지 못하여 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맞아 이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소비 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과소비계층과 건전한 일반소비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건전한 소비계층의 일하고 싶은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국민정신의 함양이 곤란하게 되어 사회적 위기감내지 불안조성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외경제여건을 잘 소화하여 안정적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경기회복과정에서 휘발유 소비량이 30%이상 증가하고, 백화점 매출액이 80%이상 증가하는 등 일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동향〉

(전년대비, %)

	'86	'87	'88
경제성장률(A)	9.7	12.8	12.2
민간소비(B)	6.2	8.4	8.6
(탄성치 B/A) (0.64)	(0.66)	(0.71)	

따라서 경기상승국면에 나타나기 쉬운 이러한 과소비 풍조, 부동산부기 등의 부작용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4. 대 책

70년대 후반에도 우리경제는 해외건설 부문진출 등으로 모처럼의 호기를 맞았으나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안정성장의 기초위에 원화절상, 수입압력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과소비 만연행태에 재동을 걸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이에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으로는 먼저, 과소비의 근본원인이 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부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종합토

지세제 도입 및 양도소득세제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소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높이도록 세제개편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적대비한도를 축소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인상하고 금융자금공급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범사회적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행사의 간소화는 물론 예산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국산품과 수입상품의 품질비교 및 그 결과를 홍보해서 국산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수입상품 선호경향을 시정토록 하여 분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으로 존경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가 절제하고 아끼는 데서 얻는 정신적 만족을 소비로 부터 얻는 물질적인 즐거움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분별없는 과대소비 흔들리는 국가경제

특집 / 과소비 실태와 문제점



과소비 그 문제점은?

배성심 (한국부인회 총본부 법률상담실장)



시장개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과 대응자세이며, 그 부작용인 것이다. 효율적인 개방의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원칙이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소비는 결국 경제효용과는 무관한 경제적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상 소비가 미덕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서구와 미국에서도 소비는 결코 미덕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소비란 성장, 즉 공급을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이론전개에서 나온 말이다. 그 결과로서 대중 소비단계가 열리고 그때 대중의 소비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촉진제로서 미덕을 지닌다는 것이 소비미덕론의 실체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은 소비보다 저

축이 미덕이며, 하물며 과소비나 낭비란 덕목이 아니라 악덕일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전에 없는 시장개방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을 비롯, 밖으로 부터의 개방압력을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싼든 좋은 외국제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자유화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래에 와서는 농축수산물

에서부터 식품류,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값비싼 외국수입상품이 대거 국내시장에 밀려닥치고 있다.

그런데 시장개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과 대응자세이며, 그 부작용인 것이다. 효율적인 개방의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원칙이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소비는 결국 경제효용과는 무관한 경제

적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그 낭비가 누적되면 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고용 축소, 가계소득 감축에 이어 종내에는 외국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마저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불행스럽게도 최근 국내시장의 수입상품의 범람과 과소비현상은 그러한 시장개방에 따라 우려했던 부작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합리적 소비행태를 바탕으로 한 수입상품의 건전한 수요관리와 질서화법이 당면한 경제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만 볼 때 고소득층의 과소비를 반영한 일반소비재수입이 50%나 급증했다. 일부 사치품목은 4백배나 증가하고 잘못된 수입상품 선호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들 상품은 터무니없이 대부분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최고 12.7배나 된다고 한다. 오디오, 카세트, TV 등 전자제품도 국산보다 보통 3배 값이다. 자동차, 화장품, 술도 비슷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가격과는 관계없이 날개돋친 듯 잘 팔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장사속을 알새운 외제상품의 제조업체와 종합상사들마저 끼어들어 선수치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판국이다.

소비에 있어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필수적이다. 지난 몇년간의 국제수지 흑자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들뜬 것 같다. 가난할 때에 한문이라도 아껴쓰며 꼭 필요한 것만 사겠다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제품에 대한 뿌리깊은 선호사상

을 근절시켜 나아가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때다. 단순히 외제라거나 유명브랜드라고 해서 현혹되거나 물건의 외양 품질광고에 사로잡혀 충동구매해서는 안된다.

소비의 원칙은 언제나 소비의 효용을 가장 적게 하면서 소비의 효용을 최대화 하는데 있다. 그것이 바로 보람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며 경제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할 것없이 소비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원리를 저버리고 낭비를 반복할 때 우리경제의 발전은 저해되고 퇴폐산업만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소비억제와 투자진척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부계층에서는 호화주택을 선호하고, 고급승용차가

늘고 있으며 고급음식점, 레저시설만이 늘고 우리의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른바 과소비와 낭비란 개념은 소비의 불균형과 관련된다. 우리는 아직 자금자족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과시적 소비란 필연적으로 외제 수입품목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아직 외제가 남용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관세청이 집계한 올 1/4분기 수입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입증가율은 21.4%이며 비생산적 소비재품의 수입증가율은 7배에 달하고 있다. 그 품목도 사치성 일변도여서 외국승용차의 1/4분기중 수입량이 465대로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량 487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학생이 가지고 노는 모형비행기가 1백20만원의 정찰가를 붙이고 버젓이 진열장에 앉아있고, 일본산 소니 TV가 3백70만원, 국산 대형 냉장고

가 3백30만원의 정찰가를 붙인 채 버젓이 팔려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덩달아 국내제품 가격도 비싸게 매매되고 이상하게도 비싸야 잘 팔린다는 상술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과소비만해도 그렇다. 과소비란 오늘 이 사회에 있어서 심소한 소비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것대로 독립된 소비의 양식이다. 우리는 너무 오랜기간 물리적 가치만을 가치의 기준으로 보아왔고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준 역시 물질로서만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 때문에 또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표시하는 방법도 과시적 과소비품의 소유로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치관을 뒤집는 일은 구태여 지적할 필요도 없이 단시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또는 행사적 캠페인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더욱 조건이 나쁜 것은 우리의 사회운영태도가 말로서는 과

소비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적정한 사회만들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개인주의적 이윤추구의 기업가들과 이를 허용하는 정책의 공동책적 조장이다.

대형 퇴폐풍조의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은 그 예이다. 또 그런벨트나 교육환경을 훼손해 가면서도 허가해 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정책의 책임일 뿐 아니라 그나마 마련해 가지고 있는 기초적 규칙들마저 위배하는 비리의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존하는 모든 부문의 법적 질서조항들 만이라도 철저히 운용한다면 현상의 한 측면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해오지 않은 공적의무의 해이한 결과를 이제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하게 되었다.

이보다도 더 큰 원인적인 문제는 오늘의 과소비를 전도하는 책임에는 「쉽게 번돈」이라는 범인이 있다. 쉽게 번돈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만원대의 빚대가 팔리는 것보다 7만원짜리 손수건이 일반백화점에서 재고없이 팔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번돈의 존재영역이 상당히 넓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검약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로서 행사로서 강조하는 일만으로 병리를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회구성의 모든 부문과 거점에서 이 일은 입체적으로 동시에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전한 사회의 가치관 확립, 행정의 실시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전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수호하는 태도에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보다는 나은 삶인가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물질만능과 향락주의에서 건전사회로의 대 전환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과소비, 낭비는 비 경제적이며 나라를 좀먹는 병폐인 것을 각자가 깨닫고, 모든 소비자가 근검절약정신으로 낭비하지 말고, 과소비하지 않을 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낭비, 과소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

오늘의 과소비를 전도하는 책임에는 「쉽게 번돈」이라는 범인이 있다. 쉽게 번돈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다.





사회 : 장경자 (서울신문 생활과학부 기자)
참석 : 강상현 (동아일보 생활부 기자)
김용운 (연합통신 생활부 기자)
육상희 (중앙경제신문 유통부 기자)

과소비, 이대로 좋은가

■장경자 : 요즘 개방의 압력과 함께 외제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과소비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이나 농촌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은 과소비 실태 및 정도에 대해 점검해보고, 이렇게 과소비풍조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규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를 과소비라 판단해야 하는지, 과소비문제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소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지요.

■육상희 : 과소비라는 것은 우선은 분수에 넘치는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마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앙경제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서울시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9.8%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이나 저축성자금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하는데 썼다는 응답이 23.9%였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의 남녀일수록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이나 기타 금융수단을 이용한 저축보다는 차를 사고 여행을 통해서 즐기겠다는 성향이 약 70%에 달하는 가치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소비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대체로 저축할 돈을 먼저

빼어놓고,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 사는 소비생활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들어오는 것보다 넘치는 소비, 정상가로 현금구매하지 못하는 고가의 상품을 할부판매 등을 이용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소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경자 : 어쨌든간에 내 돈 내가 쓴다고는 할지라도 과소비는 저소득층에 상대적 빈곤감을 심어주고 심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소비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용운 : 한때는 소비가 적어서 문제였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과소비풍조가 어린이 장난감에서부터 노인들의 임종에 쓸 관에 이르기까지 광범해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자 : 어린이들 첫병에서부터 가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과소비 풍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요트까지 수입되어 팔리고 있다지요.

■육상희 : 웨딩드레스의 경우 어떤 디자이너의 작품을 입으면 성공적인 결혼과 연결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돌고 있으며, 그 디자이너가 웨딩드레스를 맞추어주고 돌려주는 댓가로 35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해요. 맞춤대여가 아니고, 있던 드레스를 빌려주는 경우 150만원대지 200만원 정도인데 그 디자이너의 고객들은 빌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돈이 너무 흔하게 쓰인다고 하고, 호화혼수 등에 관한 이야기에는 식생활 정도지만 웨딩드레스 한벌값이 500만원을 웃가하고 그나마도 디자이너의

손이 팔려서 못만든다고 할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경자 : 그런 종류의 드레스를 입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상희 : 대개는 부동산 등으로 갑자기 매돈을 번 사람들이더군요. 결국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취재를 나갔다가 그런 드레스를 맞추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어떻게 이렇게 비싼 드레스를 맞출 수 있는냐고 물어보자, '평한평만 팔면 되는 건데 그까짓게 무어 그렇게 대수냐'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요즘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소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첫병에서부터 국산의 5백 이상이나 되는 외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형편입니다. 아예 국산은 처음부터 써보지도 않고 외제를 써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요즘 남자들 옷장에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 이름이 새겨진 옷 한두벌 갖지 않은 집이 없으며, 옷은 물론 넥타이, 벨트, 지갑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좀 잘살게 되면서 선물할 일이 많아졌는데 선물을 할 때는 당연히 수입품의 고급브랜드를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장난감에도 과소비 풍조가 만연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들이 원하지만 하면 무엇이든 다 사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고가의 수입장난감이 흔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모 백화점에서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와서 45만원짜리 수입자동차

를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 있는 아가씨가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거북해하다가 그 아이에게 집전화번호를 물어 그 아이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고 매우 화를 내드립니다.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가지고 뭘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 아이에게 돌려주면 될까 아니냐, 아가씨는 돈받고 물건만 팔면 되지 그런 일로 귀찮게 전화하고 그러느냐'고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의 직원들이 모여서 수근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좋은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경자 : 요새 완구용 승용차가 많이 나와 강남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아이는 노는데 같이 끼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김용운 : 저는 8개월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 짐사담하는 말이 남들은 거버이유식이니 뭐니 하는 것을 사서 먹이는데 우리집 아이만 계란찜서 먹이고 당근갈아 먹이고 하면, 무언가 부모로서의 할 도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군요.

과소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0만명 정도를 과소비를 조장하는 인구로 보고 있다고 답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1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고 물었더니 대개가 부동산업, 부동산부기, 빌딩임대업, 증권계 큰손, 고액상속자, 유흥업자 등이 이에 속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대지 200평에서 전평 100평 이상의 주택이나 실령수 6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80년 이후에 수입된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가 같다고 하위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정도의 월급장이가 소행이라도 자가용을 사야한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있는 집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40만원, 50만원하는 장난감차를 사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소비풍토에서 보면 어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사회전체가 병들어 있다고 하겠습니

다. ■강상현: 과소비 문제는 국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명에 해당하는 절대과소비층과 자기 소득에 전혀 맞지않게 소비생활을 이끌어가는 계층의 문제,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소비 원인 중 뿌리깊은 것이 남자들의 음주문화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1~2시간정도 시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3만원이상의 팁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스쳐지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따져볼 때 이것은 큰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데서 술을 마실 경우 1인당 15만원가량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런데서 술을 마시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 그만큼의 팁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헤쳐 본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존재하는 존지문화, 테이블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건네지는 돈이 너무 만연해 있어 돈의 값어치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며 또 한가지는 좀전에도 언급되었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자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해 사람들의 간을 키웠다는 것도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접대비나 기밀비의 명목으로 회사돈을 쓰는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쓴다는 개념이 없는 것도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 돈을 안쓴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써버릴 돈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엄청난 양의 회사돈을 마구 써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한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경자

내 돈 내가 쓴다고는 할지라도 과소비는 저소득층에 상대적 빈곤감을 심어주고 심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육상희: 의류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의류는 국내 디자이너의 옷이 잘 팔리고 있는데 비해 남성의류는 대개가 수입품이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와 제휴한 것이 여성복은 크게 히트하지 못했는데 남성복은 거의가 히트를 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는 모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요. 요즘은 갖고올 브랜드가 없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수입의류종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남성의류이고 가장 잘팔리는 것이 남성의류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과소비를 주도하는 층이 여성들보다는 오히려 남성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경자: 고소득층의 전신효과적인 과소비가 이제는 중산층, 농촌, 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외계만 선호하는 등 과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 말씀해 주



강상현

과소비 문제는 국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명에 해당하는 절대과소비층과 자기 소득에 전혀 맞지않게 소비생활을 이끌어가는 계층의 문제,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지요.

■김용운: 우리나라 GNP규모에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과소비 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대체로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사분기부터 그 이후까지 GNP 중에서 소비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58.95%였습니다. 소비의 비중이 계속 10%이상씩 계속 성장해오다가 이같은 수치에 도달했는데 이는 일본 57%, 대만 47.9%, 서독 55% 등과 비교해 볼 때, 흔히 사회·경제적구조가 혼란하다고 하는 이들 국가보다 소비에 치중하는 성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소비라고 하는 것이 피드백되어 재생산의 여지가 많은 것이지만 고가의 수입외제상품, 제3차산업 중 비생산적인 음주, 향락, 퇴폐적인 부문에 소비되어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는 우려가 높고 실제로



김용운

기본적으로 소비문제가 보다 인락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도덕 재무장, 윤리운동으로부터 다루어지고 파급되어야지 단순히 건전 소비촉진운동으로 다루어저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도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소비자를 개인의 의식이 깨어야 할 것입니다.

■장경자: 과소비를 국민전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절약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소비를 하는 일부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에 주는 정신적 위화감이 상당히 클텐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상현: 물론 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한때 정부에서 외화안쓰기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외화를 쓴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외화유출이나 빈곤의 원인이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 대단히 불쾌하게까지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때 정부측에서는 수도물에도 몇 센트의 외화가 들어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육상희

과소비, 과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수입개방을 막기 위해서 작의적으로 과소비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욱 불쾌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소비에 대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화안쓰기 캠페인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잘못해서 생겨난 현상을 국민들이 투기하고 과소비를 해서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인상도 지울 수는 없으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소비를 막자는 취지에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희: 과소비, 과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수입개방을 막기 위해서 작의적으로 과소비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과소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작년 한해동안 가계 소비지출이 9.6%가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10.3%가 증가했으며, 또 내구소비재만 올 4월까지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절대과소비계층이라 할 수 있는 1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계층에 의해 주도되는 과소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풍토가 전 국민의 상대적 과소비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모두가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즐기는게만 치중하다보니 결국 사회가 어수선해집니다. 과소비가 사회악과 연결되어 도덕적 가치관까지 흔들려 인신매매나 성폭행 등의 문제로 고리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절대적인 소수에 의해 저질러지는 과소비가 나머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심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에도 우리처럼 때론 번 사람이 없지않고 소위 우리나라의 상류층보다 더 잘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돈을 가졌다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돈 가졌다는 것이 악으로 취급되어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개가 정당하게 벌지않은 돈인데다가 그 돈에 대해 정당한 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다면 없는 사람앞에서도 멋있게 행동할 수 있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벌기 다 내고 행세하는거니까 불만을 가지지 않게되어 부와 빈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가진 사람을 도덕적으로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상현**: 예전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청빈하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었는데 그것이 현대 산업사회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런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청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청부(淸富)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경자**: 부동산이나 증권투자 등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편지 쉽게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번 돈으로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과목당 몇백만원씩하는 과외가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과외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엄청난 과외고급비를 받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할 때 자제를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용운**: 고등학교 다닐 때만해도 몇만원 정도의 용돈을 쓰다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경우 능력만 있다면 100만원 정도는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의 고급술집 등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분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다가 졸업하면 대개가 초임이 그에 훨씬 못미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이 직장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조차도 써먹어가는 상황이라서 과외문제는 우리사회의 병폐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노동자들의 주머니는 유류주머니와 같아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블랙 포켓에 들어있는 돈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얼마만큼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제나 제도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한 과소비 풍조도 해결하기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문제가 보다 안락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도덕 재무장, 윤리운동으로부터 다루어지고 파급되어야지 단순히 건전소비촉진운동으로 다루어져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가지지 않은 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한으로 줄여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장경자**: 요즘은 정신적 풍요니하는 소리를 하면 오히려 바보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까. 또다른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상현**: 흔히 세계개혁을 하면 뎀만한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당국자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고소득층에 속하는 상부 10% 정도가 어느정도를 내놓으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입을 것이라라는 식으로 분배철학이 뚜렷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디다 어떻게 세금 매기면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나 대기업 운영을 하는 사람들, 권력을 토대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재주껏 세금을 적게 내고 자기의 이익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상부 10%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발상 자체를 봉쇄해버려 결국 중간소득계층만 항상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의 노력, 즉 위력이 많이 먹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상희**: 내 직장을 걸고 투쟁을 해서 어렵게 15~20%의 임금인상을 해봤자 불과 몇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퍼마켓에서 바로 접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힘들여 얻은 임금인상이 물가조차도 못잡는 정도가 되고 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모두가 내 몫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물가가 그 몫보다 더 오르면 내 몫으

로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점점 살기만 힘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배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분지 않는다면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저도 몽땅 잃고마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안목을 넓혀야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조사결과 20대 남자의 60%정도가 부동산을 반드시 해야하고, 부동산을 해야만 큰돈을 벌 수 있으며, 큰돈만 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밖에 재산증식수단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과도한 부동산투자 이익분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소비자들은 비교구매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여러 백화점에서 같은 상품을 팔고있지만 백화점마다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또 백화점마다 어느 백화점은 할부수수료를 받지않고 현금가로 분할해 주는가 하면 3개월만 넘으면 할부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상품은 가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의 경우 대리점판매가격과 백화점판매가격도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비자가 현명한 비교구매를 할 때 판매자는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아도 판매에 지장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장경자**: 많은 소비자가 알뜰한



쇼핑을 하겠지만 과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돈 몇푼인데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되겠지요.

■**강상현**: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산 자동차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외제 고급자동차에는 일부터 흠집을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못가진 자들이 가진 자에 대한 위화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다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캠페인,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육상희**: 현재보다 즐겁게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건데 그런 인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자제하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용운**: 기본적으로 과소비를 주도하는 핵심계층이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이라면 그들의 부의 근본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적

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사유재산침해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토지공유개념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즉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필요를 느낍니다. 또 블랙머니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제도 등의 실시로 돈의 정체를 드러내야합니다.

■**강상현**: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적·정신적인 부문에 중요성을 둔다면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급격히 차량이 늘어나고 레저인구가 불고 있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 연극을 관람하는 인구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의 전람회나 음악회 등에는 사람이 물리지만 그 밖의 문화공간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앞으로 경제적 풍요에만 신경을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상희**: 우선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관점을 좁혀 내 주변부터 제대로 되어나갔도록 하고 점차 시야를 넓혀나갔으면 합니다.

■**장경자**: 우리 경제수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출을 할 때는 항상 우리 가계 실정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국민경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좌담을 마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 고발창구 운영보고서

(1989. 4. 1 ~ 7. 31)

근로여성상담부

고발창구에 접수되는 고발의 대부분은 성차별에서 오는 부당한 대우로 근래에 들어 눈에 띄는 건으로는 직장내의 폭행 즉, 남자상사에 의한 구타 및 성폭행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와 기혼여성 및 나이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전출이다.

이는 예전보다 여성근로자의 권리침해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여성근로자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맞서려고 하는 권리의식이 강해져 이에 따른 고발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1. 고발접수상황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54건으로 부당해고 8건, 부당노동행위 10건, 차별대우 7건, 임금체불 10건, 직장내 폭행 10건, 결혼퇴직 1건, 기타 6건 등이다. (별도자료 참조) 고발창구에 접수되는 고발의 대부분은 성차별에서 오는 부당한 대우로 근래에 들어 눈에 띄는 건으로는 직장내의 폭행 즉, 남자상사에 의한 구타 및 성폭행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와 기혼여성 및 나이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전출이다.

이는 예전보다 여성근로자의 권리침해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여성근로자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맞서려고 하는 권리의식이 강해져 이에 따른 고발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 사례연구

가. 부당인사

(내 용)

8년간 X회사 텔레크실엔 근무하던 여직원 홍씨와 이씨는 3월달에 갑자기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판매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본래 이들이 근무하던 텔레크실엔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중 홍씨와 이씨는 근속년수가 각각 8년, 3년이고 통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부당전직시키고, 자격증도 없고 입사한 지도 1년이 못되는 2명의 여직원을 그대로 근무케 했다.

이에 홍씨와 이씨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용자측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임금인상 때 이 두 사람만을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시키

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또한 이 두사람이 X지점 판매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게 하고, 이들의 일거일동을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감시·보고케 하였다.

한편 회사의 X부장이 홍씨를 불러 "나같은데 그만두겠다,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들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

(문제점)

① 경영상의 이유로 전직을 시킬 경우는 근속년수나 기타 그 업무의 적합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상식이나 X회사의 경우는 홍씨와 이씨가 나이가 많고 기혼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퇴직을 종용, 스스로 퇴직케하려는 의도로 부당전직시킨 것으로 보인다.

② 임금인상은 동일직급내에 있는

근로자간에는 차별없이 대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두사람에게만 임금인상을 적용치 않은 것은 차별대우의 금지조항을 어긴 위법행위이다.

(조 지)

① 회사측에 부당한 전직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내용증명발송)하고 회사측과 수차에 걸친 면담으로 만약 이를 철회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할 것을 고지하여 홍씨는 업무부르, 이씨는 전산실로 재발령을 받았다.

나. 부당해고

(내 용)

전씨는 X공사에 근무하던 중 '80년 8월에 X공사가 당시 '국보위 정화계획에 의한' 남녀직원 해고조치를 단행하면서 전씨를 포함 유독 여직원 전원에게만 일괄사표를 제출케 한 후 갑자기 시험을 보게 해 여직원의 90% 이상을 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시켰다.

그후 전씨는 '80년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했던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등에 준하는 처우를 받기 위하여 X공사와 총무처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X공사와 총무처에서는 당시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 구제 대상자는 남자직원에만 한하며, 여직원은 당시 해직사유가 X공사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문제점)

X공사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전씨 및 여직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괄사표를 강제 제출케 한 것은 우선 예산절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연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

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출된 사표 역시 사용자가 여직원을 해고시키려는 의도에서 자행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은폐시키기 위해 여직원을 시험에 응시케하여 불합격을 시킴으로써 정당한 해고로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다.

(조 지)

전씨의 경우 X공사의 부당한 해고조치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동법 제105조 [임의규정] 동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등의 위반행위이다. 따라서 전씨의 경우 해고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그동안 (해고기간)의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 직장내의 폭행

(내 용)

X회사에 근무한지 6개월된 윤양은 입사시에 일반사무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나, 입사후부터 경리업무 및 회계장부정리의 업무까지 하게 되었다.

본래 윤양은 인문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리부문이 미숙하여 사장에 게 몇차례 업무능력이 없다는 말도 듣고 또한 회계장부상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채워넣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중 사장이 윤양에게 장부조작을 시켰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장의 탈세이익이 적게되자 사장이 윤양을 몰아붙여 윤양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사장이 윤양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저녁식사에 초대한 후

유인, 폭행하였다.

그후 사장은 윤양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결국 윤양이 임신하게 되자 유산을 강요하였다. 계속해서 사장은 윤양에게 불법적인 장부조작의 업무를 시키며 월급도 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관계를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문제점)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상사에 의한 여직원의 구타 내지 성폭행은 주로 여직원이 상사의 부정과 실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이나 유인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인 여직원이 수치심과 협박에 의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감추기 때문이다.

(조 지)

이와 같은 상사에 의한 성폭행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윤양은 검찰에 사장을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라. 기 타

(내 용)

7살때 부터 20여년간 김씨 집에 가정부로 있는 정양은 그동안 김씨로부터 월급도 한푼 못받고, 학교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다. 일가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양은 결혼을 할 때 그동안의 월급을 모두 계산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가정부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양은 김씨로부터 도록 절도를 중용하였다. 이에 정양이 내뱉으려고 한다.
수차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여 몇차례 불용하자, 김씨는 정양을 밖에 나가지 유산을 하게 되자, 김씨의 아내가 이 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 게 하는 등 감금상태에서 감시하고 있 정양은 우선 김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정양이 김씨의 물건을 월급대신 훔치 이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무일푼으로

근로여성고발창구 접수사례(1989. 4. 1~1989. 7. 31)

유 형	내 용 및 조 치
부 당 해 고	5 / 1.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공구에 부딪혀 부상당함⇒복행을 이유로 해고⇒노동부에 진정 5 / 6. 여직원에게 일괄사표 제출요구 후 시험을 보게한 뒤 해고⇒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해고무효 소송 6 / 2. 경비절감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일괄사표요구⇒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해고무효소송 6 / 13. 이유없이 해고통보받음⇒본인도 퇴직의사있음⇒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산토록 조인 7 / 11. 대리점의 경리직에 있으면서 주부사원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해고⇒해고무효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토록 조인 7 / 12. 경력인정후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과 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5일만에 해고 ⇒해고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토록 조인 7 / 18. 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6개월이 되자 갑자기 해고⇒노동부에 진정 7 / 21. 경영부실로 권고사직 시키는데 여직원을 우선시킴⇒노동부에 진정
부당노동행위	4 / 13. 정당한 이유없이 타부서로 전직⇒전직의 부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철회요구후 철회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4 / 24. 업무량이 줄었다고 전연 관계없는 부서로 발령⇒부당한 인사조치 철회요구후 노동부에 진정 4 / 28. 서울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부당한 전출조치 철회요구 후 노동부에 진정 5 / 1. 사무직여직원에게 경비가 하는 일직, 방화, 상수도에 관한 일을 부과시킴⇒위험한 작업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철회토록 건의 5 / 18. 부당한 전출을 당함⇒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6 / 3. 사표중용 계속하자 불용⇒전보발령 후 다시 대기발령⇒사직서 절대쓰지 말고 노동부에 진정 6 / 3. 생리휴가 신청하자 인정치 않음⇒노동부에 고발 6 / 27.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7 / 8. 사원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전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7 / 10. 직장제외의 철회요구로 농성하자 사무직 남자직원들이 집단폭행⇒노동위원회에 진정
차 별 대 우	4 / 10. 고졸남녀직원이 동일한 업무하는데 임금 차이 있음⇒노조통해 시정건의 4 / 14. 남녀직원 모두 복직을 약속후 남자직원만 복직시킴⇒노동부에 고발 5 / 31. 동일직급내의 동일업무하는데 임금인상폭이 다름⇒이의제기하고 노동부에 진정 6 / 12. 여직원들이 시간외 근로까지 하는데 남자직원의 임금이 더 많음⇒노조통해 시정건의

유 형	내 용 및 조 치
차 별 대 우	6 / 19. 학력, 업무 동일 하나 임금격차 있음⇒노조통해 시정건의, 조정위원회에 고발 6 / 20. 10년된 여직원이 신입남자직원과 임금이 거의 같음⇒회사내 임금체계에 대한 노조의 시정건의 7 / 21. 생산직 사무직의 임금인상이 평균 30%이나 사무직 여직원만 10% 인상⇒노동부에 진정
임 금 체 불	4 / 22. 1달 5일 근무했는데 5일치 임금 지급치 않음⇒내용증명발송 및 소액심판청구 4 / 26. 1달치 월급 지급치 않음⇒내용증명발송 및 소액심판청구 5 / 1. 야간수당 지급치 않음⇒내용증명발송 및 소액심판청구 5 / 10. 기본급 줄여 생리수당으로 지급⇒노동부에 진정 5 / 16.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치 않음⇒소액심판청구 6 / 18. 개인병원에서 10년간 간호원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 지급치 않음⇒간호원 및 종업원이 총 2명이므로 근거법상 퇴직금 규정 적용은 어려움. 6 / 19. 2달제 월급을 안줌⇒학원을 폐원하려함⇒소액심판청구 7 / 19. 1달 20일 근무했으나 20일치 월급 지급치 않음⇒내용증명발송 및 소액심판청구 7 / 20. 2달치 월급을 안줌⇒소액심판청구 7 / 20. 1달치 월급을 안줌⇒소액심판청구
직장 내 폭행	4 / 24. 전화잘못 바꾸어주었다고 폭행⇒2주진단 반응⇒폭행죄로 고소,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 5 / 6. 담당부장 욕했다고 구타후 정직(停職)당함⇒총무처에 소청(訴請)해 승소⇒폭행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개사과 및 손해배상청구 5 / 16. 야유회가기로 했으나 못 감⇒회비내지 않자 의자로 등을 쳐 2주진단⇒폭행죄로 고소 및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 5 / 19. 출장지에서 사장에게 성폭행당함⇒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6 / 9.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폭행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6 / 20. 경리장부를 잘못 작성하다고 하며 유인, 과장이 성폭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 6 / 20. 사장이 저녁식사초대후 성폭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6 / 30. 동료남자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후 폭행⇒폭행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7 / 3.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동료남자직원이 구타⇒폭행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7 / 5. 20년간 가정부로 있으면서 월급도 못받고 최근엔 주인집 남자에게 성폭행⇒폭행죄로 고소, 손해배상청구
결혼퇴직중용	6 / 5. 결혼발표하자 퇴직중용⇒사직서 절대쓰지 말고 노동부에 진정
산전후 휴가 단속중용	4 / 13. 산전후 휴가 30일만 인정⇒법정휴일이 60일임을 주지⇒인정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
기 타	7 / 21. 생리휴가 서면요구⇒휴가신청은 구두나 서면중 편리한 것으로 할 수 있음⇒사용자가 서면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것이 무방.

농산물의 발암물질 파동

안기희 (민중당 보사전문위원 ·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로 인한 큰 수해까지 겹쳤다.

연초 외신에서 환경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유여를 온실효과와 오존층파괴로 세계 도처에 가뭄과 홍수의 기상이 변을 예언하더니 그것이 적중되어 자연후사에 대한 인간에 보복을 당한듯 해서 몇척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기상이 변 못지 않게 신문지상을 온통 뜨겁게 한 기사때문에 지금도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7월의 자음에 든 농약 '알라' 파문과 8월 들어 '미국산 체리, 사과주스에 발암물질'이라는 농약파동때문이다.

이와같이 7, 8월을 온통 뜨거운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논쟁의 대상이 된 '알라'의 정체를 대해 좀 알아보기로 한다.

원래 '알라'로 더 잘 알려진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농약은 칼라 B-9 등의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미국 유니로엘케미칼사가 '63년도 화분용국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처음 시판하게 된 것이다.

그후 '69년에는 사과와 낙과방지와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이 변 못지 않게 신문지상을 온통 뜨겁게 한 기사때문에 지금도 그 여파가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7월의 자음에 든 농약 '알라' 파문과 8월 들어 '미국산 체리, 사과주스에 발암물질'이라는 농약파동때문이다.

보받았다.

그런데 금년 5월 24일 EPA는 연방정부관보에 '알라' (다미노자이드)가 발암물질이란 판정과 함께 이의 생산·판매·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EPA는 이 관보에서 사과에 1ppm, 체리에 23.7ppm, 포도주스에 0.02ppm, 땅콩 버터에 0.8ppm, 쇠고기에 0.01ppm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발암물질 판정과 함께 등록취소를 당한 '알라'의 생산업체인 유니로엘케미칼사는 미국 EPA의 결정에 승복하여 '알라'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알라'를 회수하였다.

'알라' 즉 다미노자이드는 다메틸아미노숙시니마이드라는 긴 명칭을 가진 화합물이다.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가수분해 숙신과 다메틸 하이드라진(DMH)으로 분리되는데 바로 이 DMH가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DMH에는 아민기(基)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 아민기가 있는 물질 가운데는 발암성으로 문제시되는 화합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EPA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 DMH는 과일 등을 통하여 인체내로 들어갈 경우 1백만명당 45명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편적으로 1백만명당 1명 이상 암에 걸릴 화합물을 잠재하고 있는 물질은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DMH같은 유해성이 밝혀지자 미국은 당초 90년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크게 바꾸어 알라를 한발 앞서 판매·사용 등의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 환경보호협에서는 알라의 허용기준을 20ppm으로 정했으나 이 기준은 발암성 판정이 있기전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알라'가 비나인(B-9)이란 상품명으로 생산·판매되어 왔으며, 주로 사과, 포도 등의 낙과방지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약에

따른 아무런 규제 조항이나 유해성 표시조차 없었다.

다만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알라'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농림수산부에서는 지난 6월10일 비로소 이 농약의 생산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농약의 유해성을 인정한 정부 관계부처는 국내의 생산·판매업체로부터 시종 또는 농가에 유통되고 있는 B-9을 수거, 폐기처분까지 했어야 옳다. 그리고 국민보건의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검사등의 조치와 병행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유해성분으로 인하여 수입과일류의 잔류농약에 대한 시비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과일류 살충제의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EPA는 사과에 사용되는 '알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를 시장에서 즉시 몰아낼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 법안은 EPA의 감시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일단 유해하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살충제에 대해서 유해 여부를 입증시킬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개연성만으로도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EPA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판명될 때까지 몇년동안 살충제의 계속적인 사용을 묵인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금년초 EPA는 사과·자몽 등에 성장억제로 사용되는 '알라'가 물의를

빚자 '알라'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여부를 가리는 조사가 끝날 때 까지 17개월 동안 '알라'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소비자들과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산 일이 있다.

그러나 '알라' 파동과 함께 사과의 판매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알라 제조업체는 시장에 내놓았던 '알라'를 모두 거둬들인 바 있다.

EPA관계자는 말하기를 「현재로서 환경보호청은 국민에 대한 긴급한 위협수준이 아닌 경우 농약사용을 금지할 수 없지만 새 법안이 적용되었다면 '알라'는 이미 회수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PA는 더 나아가 알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살충제도 유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유해판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뒤늦은 금지 조치가 결국 EPA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큰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새 법안에 따르면 EPA가 좀 더 빨리 살충제의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 반면 살충제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오는 9월1일부터 DDT등 농약이 많이 묻은 쌀, 보리, 배추 등 28종의 농수산물에 판매가 규제됨으로써 우리들 식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고시는 보사부가 지난해 9월13일자로 28종의 농수산물에 대한 17종의 농약허용기준을 마련 고시한데 이어 1년동안의 계몽기간이 지난에 따라 금년 9월1일부터 출하되는 농수산물



보사부는 최근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알라' 등의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허용기준치를 마련함으로써 혹시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포장·수송 등 유통과정에서 오염된 식품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보사부는 우선 이에 따라 위생감시원을 파견 식료품상회, 농수산물가공업체 등에 출하된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수거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지나치게 넘으면 생산자를 추적, 해당 농수산물을 폐기 처분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검출된 농약이 허용기준치에 육박하거나 근소하게 초과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입을 타격을 감안, 지도·계몽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보사부는 이와 함께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농약잔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농수산물부에 수입금지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28종의 농수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섭취허용량과 우리 국민의 식품섭취량 및 평균체중, 미국, 일본, 호주 등의 허용기준치를 참고하여 그 기준보다 크게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쌀, 옥수수, 배추의 경우 엘드린, 디엘드린이 0.01ppm을 넘지않도록 규정하였으며, BHC, DDT는 0.2ppm, 파라치온은 0.1ppm, 옥수수, 오이, 사과는 0.5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고시의 적용에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우선 이 고시내용은 1년전에 제정 공포된 것이다. 급년 들어서만도 농수

산물수입과정에서 알라파동이 전 마스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탐스러운 사과를 비롯해서 싱그러운 각종 농수산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농약사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하여 환경청에서 환경보전법령을 강화하여 농약이 토양에 사용될 때부터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토양을 근본적으로 보전하는 일은 우리민간의 영양소의 신선도 및 모든 생태계의 근본을 살찌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두번째는 역시 환경청에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유독성 물질이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물질의 제조·수입·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미등록 유해물질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미등록 독물 및 극물에 대한 규제가 앞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사부는 최근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알라' 등의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조속히 허용기준치를 마련함으로써 혹시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포장·수송 등 유통과정에서 오염된 식품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해외여성소식

일본 사회당 대승리의 주인공 도이 다카코 위원장



7.23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참패하고 사회당이 기존 의석보다 2배가 넘는 당선자를 낸으로써 일본정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당 선거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 위원장은 그녀의 정치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이제 일본정치도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사회당의 이번 패기는 자민당 우노(宇野)총리의 기생추문과 소비세 신설, 리쿠르트 스캔들 등 여러가지로 자민당에 불리한 악재(惡材)가 작용했기 때문이지만 도이위원장의 개인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선거유세전에서 사회당 도이위원장의 강도높은 대 자민당 공세와 사상 최대인 146명의 여성후보자 후보를 가리켜 '마돈나 현상'으로 비아냥거렸던 보수성 짙은 일본사회도 사회당이 압승하고 여성후보자가 22명이나 당선

돼 의석수를 종전보다 9석 많은 33석으로 늘려자 우민파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이위원장은 선거기간중 1만 8천km를 뛰며 90회의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자주외교를 주창하고 진보적 정책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폭넓은 지지를 얻어왔다. 이는 2,430km, 5회 유세, 그나마도 야유와 조롱, 개탄세례 그리고 무관심으로 가득찬 가운데 유세를 해왔던 우노총리에 비해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도이위원장은 1928년 고베에서 부유한 내과의사의 둘째딸로 태어나 京都여대 외국어과, 同志社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대학원에서 한문을 전공한 그녀는 同志社대학 강사를 거쳐 41세때인 1969년 12월 사회당 중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지방행정·공해·외교·인권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던 도이여사는 1986년 9월 6일 중·참의원 선거 참패

로 인책사퇴한 이시바시(石橋)의 뒤를 이어 일본정당사상 최초의 여당수가 된다. 도이여사가 제1야당 위원장이 되었을 때만해도 그녀에 대한 기대는 당내 내분으로 흔들리는 당을 재건시키기 위한 '잠정적인 선택' 정도로 받아들여졌었다. 당수가 된 뒤 '자주외교'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1987년 미·중·소·북한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를 추진했고 반핵, 군축을 전세계에 호소, 제3세계에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하여 불과 3년만에 도이여사는 당의 내분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자민당을 위협하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으로 사회당의 위상을 탈바꿈시켰다.

일본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도이위원장이 참의원 여·야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 것인지 기대된다. ♣



해외여성 ⑪

법률적 상황

시에라리온의 여성은 훈련과 고용 및 승진기회에 있어서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하며 법의 실행에 있어서도 차별정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자질을 갖춘 여성도 충분치 않고, 훈련을 감내해 낼만한 자격을 갖춘 여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다. 최근에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극적인 변화로 이 나라 여성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개정위원회는 사생아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a) 사생아 부양을 위한 지불액은 주당 30실링에서 100레오네(1leone(Le) = 100cents, 시에라리온의 화폐단위)로 증액되어야 한다.

(b) 법정은 부모중 한쪽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과 같은 어떤 특별한 상황하의 모든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

명령을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c) 이 새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법정은 현재 사생아를 데리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부모중 한쪽의 소득, 수입능력 및 재산정도를 조회할 권한을 지녀야 한다.

법률개정위원회는 또한 합법적인 자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생아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도록 상속법 개정을 제안했다. 사생아라 할지라도 일단 입적된 이후에는 누구나 합법적인 혼인관

시에라리온 여성의 지위

법률개정위원회는 합법적인 자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생아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도록 상속법 개정을 제안했다. 사생아라 할지라도 일단 입적된 이후에는 누구나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법적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수정안은 양자법과 더불어 1988년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계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한 법적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수정안은 양자법과 더불어 1988년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보건

대부분의 주요도시와 마을에는 깨끗한 식수가 공급된다.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와 더불어 영양 위생 및 청결에 관한 캠페인이 실시되어왔고, 병원과 가정내의 환자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교육 및 훈련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범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고등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해외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자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비록 정부가 장애자를 위한 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임금을 지불하지만 이들 시설은 사조직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웃과의 적응을 각개 가정내에서 시작한다. 언어차이가 배움의 문제에 영향을 주긴하나 어린이들은 학교로부터 그들의 수학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

중퇴생들은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은 직업훈련원이나 기술산업교육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수는 국민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수보다 훨씬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재학률의 점진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경제상황

●고용기회 - 시에라리온 여성은 각 계의 전문분야에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를으로써 그들의 지도력과 능력을 입증해왔다. 많은 여성이 변호사, 판사, 국장, 교장 및 대학강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교 부총장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주요장관직에도 여성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광범위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리온 연론계의 요직은 남성이 독차지하고 있다. 여성 연론인은 몇 안되는 수의 기자와 편집인 뿐이다.

사기업분야보다는 공공분야에서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활약하고 있다. 공직은 성, 종교, 등의 제 요소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지원자가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임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비공식분야의 참여실태 - 자가영업: 많은 여성이 농업·식품소매업·요식업·음료판매 및 방직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상당수의 여성이 협동조합이나 '에수수'라 알려진 전통적 상호신용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여성은 자녀들의 학

교육성회비나 교복 및 교과서비를 충당할 때 신용조합금액을 이용하며 소규모 상거래시의 무자금 장래부의금 및 병원청구액까지도 신용조합금으로 조달된다.

여성의 의사결정

여성은 국가 및 지방의 각종 조직체내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회 1명, 중앙위원회 5명, 법률개정위원회 1명, 시의회 4명, 국회의원 3명, 대사 1명, 시장 1명, 치안관 8명, 종교지도자 4명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농어운영위원회, 소경복지사회운영위원회 및 종교조직체들의 결정사항에 여성이 참여한다. 여성연합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을 수행해 왔다.

내년에는 여성사무국이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부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의 위기

1989년을 음란·나체·폭행 추방의 해로 정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는 7월1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음란·나체·폭행 추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 세미나의 주제 강연 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전병재 (연대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의 실상

우리는 지금 심각한 사회무질서 속에서 각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의 어지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간접적인 가해자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판국에서 나만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가해자일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인해서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 입각해서 오늘의 사태를 비도덕적인 상황으로 단정하고 매도하는 대신에 확고한 도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오늘의 사회적 무질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의 위기〉라는 주어진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한다.

우리는 확실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자가용을 몰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간에 가장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참사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고,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어린 딸이나 손녀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거나 앓을까 하는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아들이나 손자가 어느 순간에 성폭행의 가해자로 둔갑해서 하루 아침에 스스로와 집안을 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정집에 집단으로 침입해서 강도 강간을 하는 소위 가정괴괴범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건들도 가정주부까지 납치해 가는 인신매매단들의 가공할 범죄행위나 중산층의 청소년들에 의한 소녀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의해서 매스컴 뉴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과거 30년동안의 범죄통계를 보면 강간사건이 엄청난 비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범인들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아울러 간통과 같은 기성층의 성범죄도 큰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우리사회 성풍속도의 문란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향락적 사회문제는 히로뽀를 필두로 하는 각종 마약문제이다. 술과 마약등의 문제는 섹스와 더불어 향락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퇴폐풍조가 도시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의 유흥·향락산업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고 이러한 향락산업은 넘쳐나는 고객들로 독버섯처럼 번져가면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코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밟고 있는 붉은 신호등이 환락의 분홍빛에 휩싸여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져 있는 것이 오늘 의 도덕적 현실이다. 각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에서조차 매우 선정적인 장면들이 어른들의 눈발울 찢 푸르게 하고 가족적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가 하면 쾌락의 추구가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보람인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들을 엮어가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도덕성은 가장 밖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가정안에서조차 온갖 강력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도전받고 있는 형편이다. 충동적인 본능욕구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히는 쾌락주의는 그 자체가 반윤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

비전을 위시한 각종의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윤리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이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2. 문제의 원인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겪게되는 이러한 윤리적 위기는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구사회는 서구사회의대로, 또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는 동남아 여러나라는 그 나름대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덕적 타락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왜 심각해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의 몇가지만 간추려 보면, 첫째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사회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규범적 가치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규범적 가치가 미처 정립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는 도덕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의 두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과거지향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동질적인 감성에 바탕을 둔 도덕적 질서가 주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이질적인 이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바탕을 두는 정치적 질서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질서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규범적 질서를 송두리채 허물어버린 상태에서의 정치적 질서의 확립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급세기에 들어서서 혁명을 겪은후의 북한을 포함한 여러나라의 경

우를 보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야말로 다른 사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과거 100년동안 경험해 오면서 전통적 가치가 허물어져 버렸다. 개화기 이후로는 우리가 외세에 억눌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폐습때문인 것으로 보고 전통적 가치의 탈락을 강조하는 한편 서구의 문물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 셈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그러했고, 또 동양의 다른 사회에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그러했다.

이러한 문화단절 현상에 덧붙여서 1960년대 이후로 추진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 엄청난 속도의 도시화 현상과 핵가족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물질적 차원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가고 있다. 아마도 삶의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정도로 우리들의 물질적 환경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도 정신없이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기성세대들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상대적인 적응력 앞에서 무력감조차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여태까지는 일체의 변화를 사회적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그러한 변화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기 어려워지면서부터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를 급격한 사회변동 때문인 것으로 보는 사회변동론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윤리문제는 돈과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산업사회 특유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인 것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비판하고 있지만 부의 평등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독점이라고 하는 부의 편중현상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공산사회에서도 그 형태는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의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로는 마찬가지다. 자본제 사회는 공산제 사회를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도구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격의 존엄까지도 가벼이 보는 경향이 강하기로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산업사회는 인간관계를 치열한 경쟁과 투쟁속으로 몰아감으로써 다른 인격을 상품으로 취급하거나, 자기 권력 속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적으로 취급해 버린다. 현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경쟁사회에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업적주의와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고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존중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각자는 내면적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결과가 가져다 주는 보상의 한도안에서의 쾌락을 만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사회에서의 향락산업은 번창하게 된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가장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는 인격교육을 담당해야 할 가정과 학교가 산업사회적인 경쟁논리에 휘말려서 출세재일주의적 가치만을

강조하면서 덕성교육과 인격교육은 무시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있다.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요령위주의 치열한 경쟁적 교육풍토가 청소년들의 정서를 극도로 거칠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청소년들은 자연히 비행세대로 빠져들게 되고 자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극적인 쾌락에 스스로를 던져버림으로써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변태성 향락산업이 학교주변에서조차 성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변동론과 산업사회 비판론은 다 같이 우리사회의 윤리적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지만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는데는 이러한 보편이론에 덧붙여서 한국사회에 특수한 요인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준전시상황이다. 6.25 전쟁이후 거의 40년간을 전쟁이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

르는 위기상황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들의 심층심리 속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갖기 쉬운 찰나주의와 도피주의적 근성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세대들에게는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세상이 뒤집히더라도 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기때문에 당장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주의로 일을 처리한 후에 적절한 시기를 타서 해외로 도피해 버리자는 풍조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오늘의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6.25전쟁의 악몽에서 해방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찰나주의적, 도피주의적 근성에서 파생하는 비도덕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땅에 자손만대 뿌리를 내리고 살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역사의 두려움을 느



현재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경쟁사회에서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업적주의와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하게 되고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존중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각자는 내면적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결과가 가져다 주는 보상의 한도안에서의 쾌락을 만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사회에서의 향락산업은 번창하게 된다.

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당장의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영속적인 가치에 신경을 쓰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끝으로 오늘의 우리사회의 윤리적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도기적 정치상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강화된 통제위주의 권위주의 체제속에서 30년동안 억눌려 온 각종의 사회적 욕구가 한꺼번에 과격한 형태로 분출되면서 사회적 통제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는데다가 과거에 자행되었던 각종의 권력형 비행과 부조리가 노출되면서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형편이다. 아직도 헌정부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사회세력들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치안부재를 틈탄 각종의 범죄와 통제력의 약화를 이용하는 각종의 향락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안정이야말로 그 사회의 윤리적 질서확립에도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선 정치인들은 응분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문제의 해결

향락적 사회현상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위기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때나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의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잘못된 처방

은 보다 심각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약이나 음란물의 단속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보다 높은 정치적 가치를 해치거나 않을까 하는 조심성을 보임으로써 속시원한 해결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회가 많다. 퇴폐성향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병들게하고 또 각종의 범죄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각종의 향락적 사회현상의 심각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에 쫓겨서 과격한 처방을 내리게 되면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보다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오랜 시일에 걸쳐서 생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해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일깨워주기 위한 사회운동이 조율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야말로 지역적 생활권이 단위가 되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자기 이웃에 건전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웃끼리 조용하면서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은 이웃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해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반상회의 활성화운동 같은 것이 정부주도적인 차원이 아닌 민간적 차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또다른 운동은 각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직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이나 아닌지 모른다. 우리 모두의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는 응당 정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과 염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서 제도장치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올바르게 요구할 줄 아는 국민이 될때에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이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퇴폐적 사회분위기로 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가정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주인인 주부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주부들이 이 문제를 보다 철저히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웃공동체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나 또 이를 통한 결집된 요구를 제도정치 과정으로 반영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운동이 차분하게 전개되면 주부 각자의 문제의식이 보다 올바르게 정립될 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사회문제에 공범자적인 면은 없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사회를 보다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

혁명기 와중에 변화하는 중국여인상

박금옥 (중앙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영화전체에 일관되어있는, 결코 아테올로기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신념은 이 영화를 수준높은 사회주의 비판영화, 정통 문예로망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호옥음의 경연하는 '부용진' 여주인인 아담담도
연출한데다, '부용진' 감독이 아담담도



호옥음이 경연하는 '부용진' 여주인인 아담담도
연출한데다, '부용진' 감독이 아담담도

해외의 메스컴들이 중국판 『여자의 인생』,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평한 오늘날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謝晉 감독의 최신작 『부용진(芙蓉鎮)』이 호암아트홀에서 상영되고 있다.

영화의 제목 『부용진』은 중국 호남성 남단의 가공의 마을의 이름. 이 마을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는 소문난 미녀인 여주인공 호옥음(胡玉音)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6년간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어떻게 뿌리째 뽑혀나가 파괴되어 가는가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화전체에 일관되어있는, 결코 아테올로기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신념은 이 영화를 수준높은 사회주의 비판영화, 정통 문예로망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호남성의 남단, 두개의 개천이 흐르

는 가운데 광동성과 광서자치구에 접한 교동의 요지인 작은마을이 부용진. 1963년 봄, 장이 서는 날이면 여주인공 호옥음이 경영하는 쌀두부가게는 정신차릴 수 없이 밀려드는 손님으로 붐비던 틈이 없다.

그에게는 마음씨 착한 여계계(黎桂桂)라는 남편이 있지만 물려드는 손님들은 호옥음의 뛰어난 음식솜씨와 넉넉한 마음씨와 함께 늘 명랑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위해서이다.

항일전쟁의 무사로써 지금은 미국관 리소 주임인 곡연산(谷燕山)은 두부의 원료인 쌀을 옥음에게 빼돌려 주어 그의 가게를 번창케 해주었고, 이를 시기하는 국영식당 여주인 李國香도 좋아한다.

그외에 옥음의 가게의 명주인으로 과거 빈농출신에 걸맞으면 당을 팔고다니는 거리의 문재자 왕추사(王秋赦), 출세하기위해 옥음과의 사랑을 저버렸으나 지금은 3명자식의 아버지로 옥음

과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만경(黎滿庚)이 등장한다.

옥음의 가게 한구석에 늘 죽치고 앉아있는 五惡分子(지주·부농·반혁명분자·우파·불량배)는 진서전(秦書田)이다. 그는 이 거리에서는 최고 인텔리인데, 우파로 낙인이 찍혀져 스스로 바보를 자칭하고 사는 기인이지만 이 거리에서 인기가 있다.

진은 본래 현(縣) 가무단에서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용진 마을의 혼례풍속에서 취재한 가극이 반사회적 작품으로 몰려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진 '인민의 적'이 되었던 것이다.

옥음부부는 파나는 고생살에 돈을 모아 가게를 신축한다. 그러나 두사람의 꿈은 무참하게 부서진다. 정치공작 반장으로 승진한 이국향이 두사람을 자본주의적 부르조아라 몰아 처단하려는 때문이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옥음은 친신만

고 끝에 모은 돈 1천5백원을 여만경에게 맡기고 친척집에 피신한다. 그것이 들켜 여는 맡아둔 돈을 정치공작반에 넘겨준다. 옥음이 돌아왔을 때 거리사정은 일변했다.

곡연산과 여만경은 직책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이미 죽었다. 옥음에게는 '신부농'이란 낙인이 찍혀졌다. 1966년 봄 문혁의 폭풍이 밀어닥쳤다. 이국향도 숙청되고 왕추사는 감부를 쓰고 큰소리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복권되고 왕은 그에게 아첨한다.

호옥음과 진서전은 신부농과 반동으로 각기 낙인찍혀 새벽 중심가 돌담길을 청소하라는 형벌을 받는다. 두사람은 같은 죄인으로 일하다 사랑을 하게 된다. 그들은 동거하고 임신하여 당에 결혼허가를 요청하나 거절당한다.

두사람 집 문에는 '大畜生の男女' '反革命夫婦'라는 표지가 붙여진다. 그날밤 두사람은 둘만의 결혼식을 치루나 곡연산이 나타나 축하해주고 증

인이 되어준다.

재판소는 허락없이 결혼한 진서전에게 10년, 호옥음에게 3년형을 언도하나 호옥음은 임신중이라 집행유예, 결국 두사람은 헤어진다. 옥음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3년의 세월이 흐른다.

'79년 문혁이 종결되고 3년이 흐르자 옥음의 물수당했던 집과 1천5백원의 돈을 되돌려 받는다. 진서전도 명예를 회복하여 돌아온다. 이 서류에 서명한 것은 이국향이었다.

진서전과 호옥음은 감격의 재회를 하고 아버지없이 태어난 谷軍도 아버지를 만난다. 호옥음의 쌀두부집은 다시 옛날처럼 번성하게되고 진서전에게는 문화회관 관장이라는 자리가 주어지나 부용진에서 호옥음과 아들 셋이서 살겠다고 선언한다.

거리의 혼잡속을 정신이상이 된 왕추사가 누더기를 입고 쟁과리를 치며 "또다시 정치운동 시작하시다"라고 떠

들며 다니나 누구하나 눈길을 주는 이도 없다. "이 영화를 보지않고는 중국의 현대사를 말할 수 없다"고 지칭되는 『부용진』에서 호옥음역을 맡은 여배우 黎曉慶은 스스로 "천편일률적인 전부한 영웅적 여인상을 연기할 때가 가장 혐오스럽다"고 말하지만 오 오늘날의 변화된 중국여성상을 연기하는데는 더할 나위없는 적역을 맡았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타로 그 자신이 『부용진』에 출연하기를 열망했던 그는 명장 謝晉감독의 지도로 다시한번 새로 태어났다고 평가되고 있다. 『부용진』은 '87년 중국의 제 10회 백화상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남녀 주연상 등 5개부분상을 휩쓸었고, 금계상에서도 최우수 작품상 등 4개부분상을 받았다.

전세계 50여개국에 수출되어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부용진』의 원작은 소설가 古華의 동명 장편소설로 81년에 발표되어 제 1회 무순문학상을 받았다.

이 소설은 영어·프랑스·러시아·독일·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삼중당 등 3개출판사가 번역, 출판했다. ◆

각자의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운동

최진숙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홍보·출판간사)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지만 지상의 썩은 것만 찾아다니는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일까. 개인당 국민소득이 4천불이 넘어 선진국대열을 넘보고 있는 수준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소비생활은 어떠한가.

작금의 소비행태는 예로 든 독수리와 흡사한 것 같다. 대형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산더미같이 쌓인 수입식품이며 주방기구, 잡화들을 볼 때마다 수출국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쓰레기 하치장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정말 속이 상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초코렛이나 스낵류의 과자들을 정크푸드(쓰레기식품)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먹이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되는 과일에만 농약을 잔뜩 친 과일도 남쪽 남쪽 받아먹고 있고 또한 최근 가짜 외제가구사건에서 보듯 국내업체까지도 부화뇌동하여 가짜의제를 만들어 몇 십배 비싸게 파는 등 소비자나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함께 충을 추고 있어 한여름의 폭염만큼이나 과소비행태나 무절제한 사회분위기가 극에 달해 있다.

소비자보호운동의 한 부분을 거들면서 다른 소비자를 보호한다기 보다 나

자신이 보호받고 나 자신이 현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존·듀이가 한 말인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운동은 직업이라기 보다 생활의 일부라고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또 전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사실 요즘처럼 소비자란 단어가 익숙해진지는 오래지 않다.

아직 내 주변에도 소비자보호운동을 한다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친지들이 많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소비자운동의 영향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소비자운동이 시작된 것은 60년대라고 하지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설립된 '78년에 비해 고발건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소비자단체의 활동분야도 여간 넓어진 것이 아니다.

소비자단체의 감사결과 발표 하나만으로 국내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며 그로 인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최근 자몽의 농약잔류검사발표는 대기업이 자몽의 대량수입을 자제하고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몽주스조차 제조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만큼 성과가 큰 것이었다. 이것은 소비자운동이 어떠한 이권이 개입될 없이 공익을 위한

순수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소비자보호운동은 어떤 전문분야의 운동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요구되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생활 주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생활 케치플레이즈도 「현명한 소비자」에서 「자립하는 소비자」로 바꾼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몇몇 소비자운동가들이 끌고 가는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들이 동참해서 협조하는 소비자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과소비문제는 중요한 소비자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외제선호나 과소비행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각자가 절제하고 나 자신이 과소비행위자가 아닌지 둘러보아야 한다.

「내가 하는 과소비, 나라경제 좀먹는다」 비록 평범한 표어이지만 모두가 반성하고 나라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

이달의 여성계동향

불멸더위 탓인지 7월 여성계도 이렇다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문을 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한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했을 뿐 여타 단체들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소비자관련단체들의 활동은 7월 들어 더욱 두드러져 대조적이었다. 수입식품의 발암물질검출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7월 여성계의 동향을 살펴본다.

김경자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전반적으로 여성계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몇개의 행사와 소식이 눈에 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창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회진출」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음란·나체·폭행 추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및 세미나」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 등이 그것.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방안 발표

지난 20일 정부는 제7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정부각부처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현재(88년말) 5.5%에서 2천년까지는 15%로 확대시키겠다고 발표, 남보를 전했다.

현재 5.5%에 불과한 정부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1단계로는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끝나는 91년까지 평균 10%, 2단계로 2천년까지 15%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사실 지난해 열린 제

5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나 실천이 미흡, 88년말 기준으로 정부산하 위원회 3백46개중 여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48개, 총 1만6백45명의 위원중에서도 여성은 5백85명 5.5%에 불과했다.

뒤늦긴 했지만 정부 각부처 위원회에 여성참여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회진출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가 정부에 의해 주어진 것과 달리 여성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국정치문화연구소가 창립기념으로 지난 14일 개최한 「여성과 의회진출」 학술세미나가 그것으로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성후보자가 출마했던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태도」란 조사결과가 나

와 눈길을 끌었다.

아직도 성별자체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여성후보자에 대해선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부정적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 세미나에서는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회진출 장애요인은 ▲남성후보 선호관과 함께 ▲여성후보자의 정치적 능력부족 ▲정당 공천과정의 불이익 ▲소선거구제 등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지속적인 사회진출로 여성에 대한 편견시정, 정당공천에서의 여성특별배려, 중·대선거구제도 선거제도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세미나 참가자들은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세미나엔 미국의 유명한 여성정치전문가 로버트 달시 교수가 참가, 「저조한 여성의 의회진출은 서구도 마찬가지」라고 전제,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선 선거구제개편, 쿼터제도입, 재선횟수제한, 선거자금상한제 실시, 여성의원 고충에 대한 홍보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달의 여성계동향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주최 학습세미나 - 「여성과 의회진출」

향락·퇴폐풍조 추방 세미나 및 캠페인 실시

한편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급증하고 있는 향락·퇴폐풍조와 관련, 지난 11일 「음란·나체·폭행 추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폭력성완구·영상물·매스컴 및 향락적 사회현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윤리회복 및 건전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 5월부터 작업에 들어간 가정폭력소제영화의 촬영을 끝내고 녹음작업에 들어갔으며 8월중 순경 시사회를 거쳐 여성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25일부터 6일간 한강미사리조경경기장에서 국제걸스카우트 야영대회를 개최, 4년마다 실시되는 국제야영대회의 이번 대회엔 호주 일본 등 6개국 5천9백여 명이 참가했다.

발암물질 검출된 자몽 과문 확산

자몽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알라의 과문은 갈수록 확대, 6월에 이어 7월에도 큰 이슈로 부각됐다.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들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한데 이어 수입 사과·체리·쇠고기에서도 알라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몽사건이후 소비자단체들의 외국산 식품에 대한 농약 등 유해성분 잔류검사가 더욱 활발해졌고, 수입상품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간담회 및 세미나도 잇달았다.

반면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들은 이들 검사에 소극적인데다 미국은 한술 더떠 무역보복조치까지 들고 나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모임, 한국부인회 등이 정부기관에 의뢰한 수입식품에 대한 유해성분 함유검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그 검사결과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고 민간소비자단체의 반미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만든 소비자보호원조차도 이 문제엔 소극적, 소비자들을 불

안케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반면 미국관련단체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미국내소비자단체들의 관련자료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한국의 검사조치에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등 위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이 문제는 소비자보호차원을 넘어 무역분쟁으로까지 확대돼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열린 한미통상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로 수입식품의 제조년월일 표시의무를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정성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 기회에 수입식품 수입상품전반에 걸쳐 위해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제조년월일 표시의 무작위는 만들어진지 오래된 것, 방부제를 사용한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보호막까지 없애버린 것으로 큰문제로 등장.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6일 「수입식품과 소비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한국부인회는 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



한라·원미동굴·수반·원미동 - 주부클럽



자몽, 사과, 체리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일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또 국내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자몽 사건을 계기로自社내에 농약연구소나 도형컨트롤센터를 설치, 수입식품의 안전성여부를 자체검사와도 잇기도 하다.

이번 자몽사건은 또 소비자운동이 인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 때 보다 객관적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국내소비자단체들 또한 보다 전문화된 운동을 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

방문판매법안 등 소비자관련법안 마련

소비자들과 가장 큰 마찰을 일으켜 왔던 방문판매에 관한 법안도 마련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구입한 경우, 또 본의 아니게 계약한 후 해약하고자 할 때는 17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게됐다.

또 소비자의 사생활침해행위, 사기적 혹은 강압에 의한 계약, 해약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몰도록 해 방문판매에 따른 시비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됐으나 이안은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문제전문가들은 지적.

자동차와 수산물 등 1과식품의 변질보상이 미흡하고 비누, 합성세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있어 소비자보호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문제가 주요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비자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비자사건전담 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우리들의 광장

- 대한간호협회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 한국자수협회
- 한국우먼스클럽
- 대한전문군경미망인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확정

대한간호협회는 금년 2월 정기대의원 회의에서 임원선출 방식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선거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원선거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6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새로이 확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운동 관련업무 ▲부표 및 개표업무 등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제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 2인 및 이사회에서 추천한 6인 등 9인으로 구성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예정일 5개월전에 설치하고 선거일 1개월후 해산하게 된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또 각 지부가 선거일 70일전까지 회장, 이사 및 감사후보자를 중앙회에 추천하되 반드시 피추천인의 추천동의서를 첨부하고 선거일 및 확정된 임원후보자의 명단은 선거일 30일전에 간협신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런닝메이트제를 채택함에 따라 회장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 제2 부회장후보를 지명해야하며 임원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1회에 한하여 간협신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표에 앞서 10분간의 연설기회가 주

어지게 된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축하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본회 강당에서 제32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를 위한 축하회를 열었다.

이날 축하회에는 올해 수상자인 김금련(전 부산 일신기독병원 간호사업부원장), 박두연(전 계명대 동산의료원 감독), 이준애(서울시립병원 간호과장) 회원을 비롯 김모임 간협회장, 원로간호사, 역대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들이 참석해 진심으로 올해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었으며 특히 전 기장 수상자인 권석해 원로회원이 축하와 격려의 인사말, 황정희 회원이 축하의 노래를 선사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 7월 10일 월례회를 갖고 오후에는 지점토 특강을 가졌다.

● 매주 화·목요일에 서예강습을 갖고 있다.

● 매주 수요일에 홈페이지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 7월 26일 김영주 부회장이 제31차 세계여자기독교절제회 총회에 참석차 캐나다로 출발하였다.

대한조산협회

경기지부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산협회는 7월 7일 수원시 대

한가족협회 회의실에서 경기지부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제1차 조산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대사회와 조산사의 역할 : 조중숙(대한조산협회장)

▲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사회 참여 :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장)

▲ 천천포기아에 대한 인권문제 : 양인식(경기도 가정복지과장)

▲ 무월경의 원인과 대책 : 신상섭(동수원병원 산부인과 과장)

▲ 영화 : 바람과 그림자(청소년 성교육 영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 미망인 위로잔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부에서는 지난 6월 25일 원호의 달의 맞아 각군의 극빈 미망인들 150명을 초대하여 위로잔치를 벌였다.

국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자

식을 잃은 많은 어머니들이 6월만 되면 더욱 애잔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점차 이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전북지부에서는 6월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기쁨이 돌아가신 영전에 다달을 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초대된 미망인들은 점심식사를 들고 강의, 다과회, 국악공연 등으로 흥을 돋구며 무점한 상품을 주는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며 도지사가 준비한 비누선물세트와 전북지부에서 준비한 생반, 세제 등의 선물전달도 있었다.

한편 이 행사를 위해 전북지부의 6개 지회장, 지부이사, 모니터 등 회원들이 다과회와 식사준비를 위해 봉사를 하였으며 이들은 이것을 통해 더욱 단합되고 한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흐뭇해 하였다.

제18기 사임당학당 수료식 가저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7

월 18일 제18기 사임당학당 수료식을 가졌다.

신사임당의 빛난 얼을 오늘의 슬기로운 한국여성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임당학당은 「신사임당의 예술과 생애」, 「생활예절」, 「가정의학」, 「가정경제」, 「한국의 전통문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번 18기 사임당학당은 지난 5월 17일 경북궁에서 열린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에 입상한 수상자들의 모임인 89클럽 회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천주 회장은 「주부로 바쁜 가사일 가운데 이같은 수료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학당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회에 나가 널리 활용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공부하는 어머니, 공부하는 아내, 공부하는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들은 수료식을 갖고 점심을 들면서 친목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연마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축하회-간호협회



미망인 위로잔치-주부클럽 전북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제11차 총회 개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에서는 7월 8일~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 그리고 정치참여」를 주제로 제1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136명의 전국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총회는 연맹 및 클럽별 사업보고, 주제강연 - 박찬중 의원 (무소속), 건의 및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심포지움 개최

여성지도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이 7월1일 대구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주최, 전문직업여성 대구·새대구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강연 :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 김남현 교수 (계명대 경영대학장)

▲ 발제 1. 사회적인 측면 - 이정옥 교수 (효성여대 사회학과)

▲ 발제 2. 정치적인 측면 - 정연식 교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 발제 3. 경제적인 측면 - 김영부 부장 (매일신문 경제부)

▲ 사회 - 손연옥 교수 (경북대 도서관학과)

한국자수협회

자수전시회 개최

한국자수협회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수원 유당마을 노인복지관에서 자수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우먼스클럽

청소년교육 실시

한국우먼스클럽에서는 7월 2일과 16일 클럽사무실에서 청소년교육을 실시하였다. 7월 2일에는 「청소년들의 성

범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양수 선생, 7월 16일에는 「올바른 청소년의 국가관과 애국심」- 이순길 선생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미용강좌 및 실습

한국우먼스클럽은 7월 5일 클럽사무실에서 김영선 선생의 지도로 「여름철 건강위생과 피부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국제문화교류대회 참석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개최된 청소년국제문화교류대회에 한국우먼스클럽 청소년 대표 16명이 참석하였다. 우먼스클럽에서는 올해로 15회째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자연보호캠페인 실시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아름다운 자연을 멋대로 훼손하며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을 선도하며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89년도 제2기 국비조리 기능훈련생 수료식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조리기능훈련원에서는 제2기 국비조리기능훈련생에 대한 수료식을 7월 31일, 동훈련원에서 가졌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과정의 한식조리기능과 양식조리기능 및 단제급식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회 각급식분

야로 배출되는 수료생에게 왕준련 회장은 격려인사를 통해 "수료생 각자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식생활개선 일선에서 활약해주길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였다.

이날 수료생들은 전업을 원하는 일반인과 영세가정의 가정부로 교육기간 동안 연마한 조리기능을 토대로 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리라 본다.

닭고기요리솜씨 호남지방대회 개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오는 10월 17일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5회 전국 닭고기요리솜씨대회를 위해 지난 6월 중 실시한 중부·영남지방에 대한 솜씨대회에 이어 7월 5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여성회관 강당에서 327명의 관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남지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청된 요리원고 132점 중 68점이 요리실물로 출품되어 솜씨를 겨

루었는데 맛깔스럽고 온갖 정성이 깃든 닭고기요리가 출품되어 이채를 띠었다.

이중 최우수상에는 '닭살더덕 삼색안주와 닭살스프'를 출품한 정난숙씨 (여, 전북 전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닭살고기로만'을 출품한 문경필씨 (남, 전북 정주시)가, 그외 장려상 3명, 우수조리상 1명이 선정되었다.

이날 참석한 주부 및 조리사들은 호남지방 주부들의 요리솜씨에 찬사를 보냈으며 전주지역 MBC-TV의 주부뉴스와 출발 동서남북에 방영되는 등 지역 매스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본회는 호남대회를 끝으로 각지방대회를 모두 마치고 각지방대회의 수상자들과 서울본선대회 참가신청자 중 원고심사를 거친 출전자들을 대상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본선대회에 참가코자 희망하는 분은 본부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우)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86번지

TEL. 733-4983



용공통일 절대배격 전국여성 쉼기대회 개최



본회는 7월 14일 파고다 공원에서 용공통일절대배격 전국여성 쉼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잇따른 밀입북 사태와 좌경용공세력으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의 위기감을 느끼어, 침묵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의견을 천명하고자 개최한 이번 쉼기대회는 서울을 비롯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려 여성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

었다. 이 행사를 위해 7월10일 전국 여성단체장들이 본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바 있으며, 본회에서는 각 시도 여협에 행사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이번 쉼기대회의 지역별 개최장소 및 시가행진코스, 참석인원은 다음과 같다.

광주여협에 수재민돕기 성금전달

본회 김경오 회장, 오정순 부회장은 수재민돕기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7월 28일 광주여협을 방문하고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 국제청소년문재연구회 임진출 회장은 7월12일 본회에 전화 1대(796-4560)를 기증하였다.

● 김경오 회장은 본회 사무처 업무용 책상 및 회의용 테이블을 기증하였다.

● 김옥환 부회장은 7월20일 본회에 전화 1대(797-5778)를, 오정순 부회장은 회장실 카펫을 기증하였다.

● 용공통일 절대배격 전국여성 쉼기대회를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모자 5000개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회장: 오정순)는 태극기 2000개를 본회에 기증하였다.

개최지역	개최장소	시가 행진 코스	참석인원
서울특별시	파고다공원 - YMCA - 제일은행 본점 앞		2,254명
부산직할시	시청앞 - 남포동		200명
대구직할시	시민회관 광장 - 대구역 - 중앙로 - 제일은행 - 한일로 - 대구백화점 - 중앙파출소		1,000명
인천직할시	시민회관 - 법원		1,000명
광주직할시	광주시민회관		850명
대전직할시	시민회관 - 시청앞		1,000명
경기도	수원: 장안공원 - 수원역 성남: 공설운동장 의정부: 의정부 역전 - 교육청 부천: 시민회관 - 소사삼거리 과천	(합 4,220)	1,200명 900명 970명 900명 250명
강원도	도청광장 - 중앙로 - 여성회관		700명
충청북도	청주예술문화회관 - 도청 상당공원		1,500명
충청남도	부여군민회관 - 군청로타리 - 백제탑 - 군청		800명
전라북도	시청앞 광장(전주) - 팔달로 - 도청앞		600명
전라남도	목포 KBS 스포츠 홀 - 목포 시내 중심가		600명
경상북도	구미 코오롱 회사 우정홀 - 구미 시청앞		1,400명
경상남도	마산 자산동 학생과학관 - 3.15탑 - 창동어시장 - 3.15극장		1,000명
제주도	시청 앞 광장 - 중앙로 - 시청 - 시민회관		700명
총 인원: 18,824명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관

본회는 6월22일 제3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전 정관과 대비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회원의 종류, 의무, 권리행사방법, 총회 참석 대의원수, 이사회 소집 등에 관한 조항이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정관의 전문(全文)이다.

전 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민간여성 단체의 협의체임을 선언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K. N. C. W.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 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본회 회원단체간의 사업협회의

자료 및 정보교환

2. 정부와 사회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반영과 건의

3. 회원아닌 국내 여성단체와의 교류

4. 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 증진

5. 그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 가. 국내여성단체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나. 지능단체의 여성부 조직체로서 전국지부조직을 갖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3년이상 활동한 단체

2. 준회원: 가. 지부조직이 없는 국내여성단체

나. 지능단체의 여성부조직체

3. 협동회원: 국내외 외국여성단체와 교포여성단체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법인인가(사회단체등록)를 받은 후 최소 2년간의 활동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가입원서 1부

2) 정관 1부

3) 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임원 및 감사명단 1부

5) 과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관제부처의 등록증사본 1부

7) 3개이상 정회원의 추천서 1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으면 조직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선출권, 피선거권(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각종회의의 의결권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금액, 부담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만 협동회원은 위의 1, 3항의 의무 이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권리행사방법) 1. 본회의 회원은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위 1항의 경우 대표라함은 회원 단체장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유고시에는 대표권을 위임한 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위 제2항의 위임받은 대표는 별도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탈퇴)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 탈퇴 된다.

- 1)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
- 2) 주무부서의 등록이 취소된 단체
- 3) 해산된 단체

제11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1년이상 제9조 1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2. 회원의 징계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12조(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되, 정회원은 회장을 포함한 4인, 준회원은 회장을 포

함한 2인의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대의원은 회원단체의 임원이거나 한다.

3.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상임 임원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5조(이사회)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이사회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상임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직전회장은 명예이사로써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회의 소집 및 정족수) 1. 정례이사회는 각월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권위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자산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8.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임원(회장 1인, 부회장 3인, 회계 2인, 서기 2인)
2. 이사(정, 준 회원수)
3. 감사 2인

제20조(임원의 선임) 1.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임원 및 감사후보는 정·준회원 단체에서 추천하되 후보는 정회원으로서 3년이상 경과한 단체의 전·현직 임원이거나 한다.

3.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4. 임기가 만료된 상임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후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권위된 상임임원의 후임자는 권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위된 임원의 후

임자는 이사회에서 그 선출방법을 결정한다.

5. 이사는 정·준회원의 단체장으로 한다.

6. 그밖에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7.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상임임원 및 감사) 상임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4. 서기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회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23조(상임임원회) 1. 상임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임원회는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4조(전임위원회) 1. 상임임원 개선 총회 직전이사회는 7명의 전임

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전임위원은 임원으로 임후보할 수 없다.

3. 이밖의 사항은 별도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25조(고문) 1. 본회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26조(상임위원회) 1. 본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조직관리위원회 - 회원의 가입,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과 단체조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기획위원회 -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여성단체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3) 재정위원회 - 재정관리와 재정지원을 한다.
- 4) 출판공보위원회 - 간행물 출간과 대외홍보를 한다.
- 5) 국제관계위원회 - 국제여성단체와 교류 및 친선을 도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이외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둘 수 있다.

제27조(위원회 구성) 1. 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사제의 권위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하

고 보선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처

제30조(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둔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5.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임원은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7.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8.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득시킨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밖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3. 본회의 소유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

거나 그밖에 권리,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한다. (단,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회원부담금, 특별찬조금, 정부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직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기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구분) 1. 본회의 회계는 경상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2. 경상업무 회계라함은 고유목적 사업에 관한 회계를, 수익사업회계라함은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및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4.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기타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8조(정관개정) 1.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가 심의한 개정안은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9조(해산)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본회 재직인원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기타 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방법) 1.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거나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회원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통지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및 감사로 본다.

3.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4.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

지방여성단체소식

부산지역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각 지방의 여성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각 지역의 활동을 돌아가면서 수록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로 부산지역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회



최정자 회장

부산직할시여성단체연합회는 1977년 6월22일 발족되어 비영리공익단체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부산의 지역사회발전과 복지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 여성단체이다.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개발, 권익신장, 여성단체간의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여성단체연합회는 22개 회원단체로 8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단체간의 각종자료와 정보교환, 친선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계몽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국내외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역사회 및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사업 및 제반 여성에 관계된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부산여성대회, 여성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연수회, 여고생들의 올바른 직

업윤리관 고취를 위한 여고생 진로지도, 근로여성의 문제점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위한 근로여성 토론회, 부산여성연합회보(연4회) 발간을 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여성의 참여 확대가 더욱 요망되는 현실에서 '89년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의회 여성할당제 법제화 서명운동, 지방의회 여성참여세미나, 여성정치위원회 구성과 바자회(22개단체연합) 실시, 부산여성상 제정 등 지역적인 여성운동의 활로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회는 교육으로 인한 의식변화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에서 탈피하여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참여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에 발맞추어 올바른 여성관 정립,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도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로 인한 각여성단체의 활동은 보수적인 활동에서 활동적인 사회압력단체로서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시여성단체연합회,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역할 강연회 가져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지역문제 해결과 주요정책결정에 여성의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정

치참여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의 광장이 6월30일 하오 2시 부산시 여성단체연합회와 세계여기자 작가협회 한국지부 주최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이대 백영옥 교수(정치학)는 「여성과 정치」, 김혜영씨(중앙대 강사) 「지방시대와 지방문화의 문제점」, 전상수씨(부산일보사 논설위원) 「지역매체와 지방화시대」, 윤희중교수(이화여대) 「뉴미디어의 방향」을 발표해 여성 참여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기조강연을 한 백영옥 교수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는 첫째 지방자치제 및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여성참여의 필요성 강조, 둘째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발표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남성중심의 설문구성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진정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폭넓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들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 셋째 여성후보들의 선거전들이 미디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일반여성들의 정치사회화를 도모하는 일, 넷째 여기자 등 미디어여성들의 영역이 정치분야로 확대돼 정치문제가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일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여성단체소식

주부클럽 부산지부, 아동대상 건전소비교육 실시

「세살적 바릇 여든까지 간다.」 과소비(過消費) 현상이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무분별한 소비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릴적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주부클럽 부산지부(지부장 차정희)는 이를 위해 7월24, 25일 이틀간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교육강좌를 마련한 것은 이 여성단체가 처음이다.

20여명의 어린이와 어머니가 참여한 이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나선 차지부장은 「어릴때부터 올바른 소비자교육을 받아 몸에 익히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져 어른이 되어서도 무절제한 소비를 하지 않으며 충동구매나 과소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물건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일이고 기업 등 생산자에게는 바른 물건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널리 보급돼야 할 것이라고 참석한 주부들은 입을 모았다.

주부교실 부산지부, 과소비방지 캠페인 벌여

전국주부교실 부산지부(지부장 차숙희)는 7월3일 하오2시부터 1시간동안 부산중구 광복동 일대에서 과소비 사치풍조추방 및 최근 수입식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입식품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생명 위협하는 수입농산물 추방하자」「호화소비생활 추방하여 경제안정 이루자」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에 나선 20여명의 회원들은 최근 수입개방 여파로 만연되고 있는 무절제한 과소비와 한탕주의 심리를 규탄했다.

부산여약사회,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간담회 개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잘못 이용하거나 남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부산시 여약사회(회장 김영길)는 7월3일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약국이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될 시점에서 이같은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여성지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료의 질적향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제강연을 한 박영규씨(부산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의료보

험이 지난 77년부터 실시돼 그동안 의료혜택의 양적팽창은 가져왔지만 질적향상은 뒤따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보험제정확보, 인력양성, 첨단기기설비 확충과 함께 의약분업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한 질적 향상이 과제라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현상 또한 의료의 질적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부산일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부	부	부	서	서	회	감	감	조	재	출	기	국	사	장	김	경	오	강남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	회	회	회	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032-93-3493
부	회	회	회	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용산구 이촌동 302-69 청우맨션 202호	794-1882
부	회	회	회	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5-106	671-0326
서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성동구 옥수동 한남 하이츠아파트 9-503	232-9090
서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 1012동 401호	503-4691
회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344
감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강서구 신정4동 983-1 이안빌딩 4층	603-5779
감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01	542-1430
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종로구 신교동 2-30	736-8229
재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동 909호	783-2924
출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서초구 서초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동 102호	586-3541
국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종로구 혜화동 15-8	762-1090
사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5-4534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강동구 망월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471-7865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	한	간	호	협	회	김	모	임	중구 범림동 88-7	279-3618
대	한	기	독	교	여	여	귀	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	한	여	학	사	협	박	용	언	도봉구 성문동 423-44	993-2378
대	한	조	산	협	회	조	중	숙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	성	문	제	연	구	박	정	자	중구 옥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	앙	부	인	회	이	순	옥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7	95-2107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영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782-3427
대	한	주	부	클	럽	연	합	주	중구 남창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	를	릭	여	성	연	합	회	주	중구 동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	문	직	업	여	성	클	럽	란	용산구 청파동 2가 53번지 화빌딩 303호	718-0915
법	태	평	양	동	남	아	시	주	강남구 삼성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	국	부	녀	복	지	연	합	한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	국	여	성	합	공	협	회	자	중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	한	미	용	사	회	중	앙	순	강남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	국	자	수	협	회	김	태	숙	강동구 천호1동 227-3	477-5383
한	국	우	먼	스	클	럽	김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46	94-5923
한	국	여	성	문	화	생	활	담	강남구 반포동 425-1 반포소공원 7동520호	503-1906
국	제	존	타	서	울	클	럽	경	종로구 재동 55 한국방한	763-1461
한	국	여	성	크	리	스	친	자	종로구 평정동 537-9	352-1872
대	한	전	물	군	경	미	망	임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782-2862
대	한	약	사	회	여	약	사	심	강남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	리	웃	협	회	이	은	임	임	종로구 서간동 74번지	734-9477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연구	련	종로구 청전동 286	733-4983

편집후기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 과소비 양상이 한여름의 열기를 무색케하는 듯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그러드는 날씨와 함께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현상도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지에서 마련한 이번호 특집이 과소비 풍조 해소에 작은 몫을 하기를 바랍니다.

월간여성 • 1989년 8월호 통권 266호
(매월 10일 발행)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한라799

발행일자: 1989년 8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전주

위원: 김효자/박금옥/박영혜/박용옥/

신동식/오종자/최장섭

담당: 오혜란

「여성」 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숲속의 궁전!



예일예식장



* 예일만의 자랑

- 각층에 식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 완벽한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대 동시 주차시설)
- 예일이 직접 회관을 운영합니다.
- 셔틀버스를 무료운행 합니다. (대공원후문 → 예식장 왕복)
- 다양한 드레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전문미용사를 두고 있습니다.

● 예약문의

453-2121
453-9871 ~ 5



성동구 구의동 58-16